

제한 문제, 수도권 그린벨트에 국한된다는 점과 환경 및 산림유지 등을 고려한 인공과목
으로 건설되며, 경제성용과 비합리한 기준 주에 의해 등이다. 또한 복구하는 것은 황태리이므로
있는 상태에서 건설되며, 경제성용과 비합리한 기준 주에 의해 등이다. 또한 복구하는 것은 황태리이므로
이다. 이러한 환경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에 주된 예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신개방주의 원리로 작동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는 시
점에서 이미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위축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주요 계기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지니지점을 통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 전방위 다각적인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는 반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위기에 내입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환경비상시국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지난 11월 10일 107개 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환경비상시국회의'를 출범시키고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고 22일부터는 주요활동가들이 단식하며 각 권역별로 환경비상기구를 구성하고 11월 27일에는 '환경비상1만환경인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사회일각에서는 먹고살기도 힘든데 웬 환경타령이냐고 하는 이들도 있다. 길 거리에 350만 농민의 '쌀사수' 함성을 비롯한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찾기 위한 절규가 뒤섞인 가운데 환경지킴이의 목소리가 힘을 받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환경인들이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후손들에게 빚을 남기지 말라는 조상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후손에게 재앙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에는 1992년도부터 지구환경의 악화정도를 가리키는 '환경위기시계'가 가동되고 있는데 지구파멸의 시각은 12시이다. 2002년도에는 이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으니 인류에게 남겨진 시간은 3시간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민간기구들이 이 시간을 되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야 한다. 80년대 붓물처럼 터져 나온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에 대하여 어떤 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일은 두렵지 않지만 우리만 죽는다는 것은 무섭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환경을 희생시켜서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기반이 환경이라는 사실이다.

환경인들이 운동 사상 처음으로 오늘을 환경비상시국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지난 수십년간 온몸으로 지켜온 생태환경이 무너지려는 이 시기에 환경인들이 철저하게 무력화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정부는 전 정권들이 벌여놓은 새만금간척사업 등으로 얽혀있는 사회적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잔디밭에 자랄 수 없는 골프장을 230개 증설하는 등의 대형 개발 사업들을 환경영향을 고려한 흔적도 없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배제한 채 날이면 날마다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할 말을 해야 하는 환경인들의 언론은 막혀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 중단과 천성산 살리기를 위한 성직자들의 목숨을 건 장거리 노상 3보1배 기도행진과 장기단식항거에 보여준 참여정부의 냉담함은 환경인들의 항의의 수단마저 앗아갔다.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새정부 로드맵이 선정한 10대과제 중에 환경을 누락시켰으며 장관들이 참여하게 되어있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3개 위원회와 5개 태스크포스팀에 개발부처 장관들은 겹치기로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모든 부서에 관여해야 하는 환경부는 배제되었다. 국무회의에서의 발언권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도 어렵지 않다. 그런가하면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들이 설치하고 있었던 환경부서도 폐쇄해버렸다. 환경정부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개혁과 국민의 참여를 표방하고 출범한 참여정부에 환경인들의 참여가 없다. 국제사회에서 중시되고 있는 협치(가버넌스) 체제를 우리도 시험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시민의 국정참여가 권장되는 상황임에도 환경인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비상시국회의가 참여정부에게 묻는 것은 정부가 과연 이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등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과의 TV공개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와 후손의 미래 그리고 국토의 보전을 위해 뜻을 같이하고 있는 1만 환경인들이 철회나 제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은 골프장 건설 및 이용에 관한 규제완화, 토지 수용과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관리지역 내의 공장설립면적 제한 폐지, 수도권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 건설 산업 및 산림녹지축을 파괴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 등이다. 또한 촉구하는 것은 확대되어가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핵폐기장 건설 등으로 빚어진 갈등해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이러한 환경관련 과제들을 풀어내기 위한 정부기구 쇄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신개발주의 원년으로 간주되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환경운동을 결산하는 시민토론회에서 이미 참여정부의 등장과 함께 환경운동의 위상이 위축되고 환경운동이 위기에 처할 것을 예측한바 있다. 이번 환경비상1만환경인대회를 계기로 환경운동이 자기성찰을 통한 혁신을 이루어내고 전열을 다듬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면 오늘의 위기가 내일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사회와 후손의 미래 그리고 국토의 보전이 환경운동이 걱정해줘 될 일이다. 이번 환경비상 1만 환경인 대회를 계기로 환경운동이 자기성찰을 통한 혁신을 이루어내고 전열을 다듬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줘 주리라 믿는다.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줘 신개발주의로 인해 주위환경에 위협의 위기를 내일을 위한 기회를 만들길 바란다.

환경비상시국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지난 11월 10일 107개 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환경비상시국회의'를 출범시키고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철야농성을 하며 22일부터는 주요활동가들이 단식하고 11월 27일에는 '환경비상1만환경인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정부의 반환경정책을 규탄한바 있다.

이를 두고 사회일각에서는 먹고살기도 힘든데 웬 환경타령이냐고 하는 이들도 있다. 길 거리에 350만 농민의 '쌀사수' 합성을 비롯한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찾기 위한 절규가 뒤섞인 가운데 환경지킴이의 목소리가 힘을 받기는 쉽지 않다. 그런 것을 아는 환경인들이 운동사상 처음으로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후손들에게 빛을 남기지 말라는 조상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후손에게 재앙을 물려줄 수 없다는 데서이다.

세계에는 1992년도부터 지구환경의 악화정도를 가리키는 '환경위기시계'가 가동되고 있는데 지구파멸의 시각은 12시이다. 2002년^{10.7}에는 이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으니 인류에게 남겨진 시간은 3시간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민간기구들이 이 시간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80년대 붓물처럼 터져 나온 환경운동에 대하여 어떤 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일은 두렵지 않지만 우리만 죽는다는 것은 무섭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환경을 희생시켜서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간파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기반이 환경이라는 사실이다.

환경인들이 오늘을 환경비상시국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온몸으로 지켜온 생태환경이 무너지려는 이 시기에 환경인들이 철저하게 무력화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정부는 전 정권들이 벌여놓은 새만금간척사업 등으로 얽혀있는 사회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골프장을 230개 증설하는 등의 대형 개발 사업들을 환경영향을 고려한 흔적도 없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배제한 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할 말을 해야 하는 환경인들의 언로는 막혀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 중단과 천성산 살리기를 위한 성직자들의 목숨을 건 장거리 노상 3보1배 기도행진과 장기단식항거에 보여준 참여정부의 냉담함은 환경인들의 항의의 수단마저 앗아갔다.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새정부 로드맵이 선정한 10대과제 중에 환경을 누락시켰으며 장관들이 참여하게 되어있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3개 위원회와 5개 태스크포스팀에 개발부처 장관들은 겹치기로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모든 부서에 관여해야 하는 환경부는 배제되었다. 국무회의에서의 발언권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도 어렵지 않다. 그런가하면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들이 설치하고 있었던 환경부서도 폐쇄해버렸다.

국제사회에서 중시되고 있는 협치(가버넌스) 체제를 우리도 시험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시민의 국정참여가 권장되는 상황임에도 개혁과 국민의 참여를 표방하고 출범한 참여정부에 환경인들의 참여가 없다.

환경비상시국회의가 참여정부에게 묻는 것은 정부가 과연 이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등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과의 TV공개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1만 환경인들이 철하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은 골프장 건설 및 이용에 관한 규제완화, 토지수용과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관리지역 내의 공장설립

면적 제한 폐지, 수도권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2/24} 건설 산업^라 산림녹지축을 파괴하는 민자고
속도로 건설사업,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 등이다. 또한 촉구하는 것은 확대되
어가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 핵폐기장 건설 등으로 빚어진 갈등해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이러한 환경관련 과제들을 풀어내기 위한 정부기구 쇄신의 필요성도 주장
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와 후손의 미래, 그리고 국토의 보전이 환경인들만 걱정해서 될 일인가. 이
번 1만인 대회를 계기로 환경운동이 자기성찰을 통한 혁신을 이뤄내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정부의 신개발주의를
예의 주시할 때 오늘의 위기를 내일을 위한 기회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